

#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선택: 비교분석\*

신윤환 · 김세걸 · 이성형 · 백영서\*\*

- I. 머리말
- II. 위기와 경제개혁
- III. 위기와 정치적 대응
- IV. 성장과 위기 속의 정체성 변화: 중산층, 전통, 개혁의 문제
- V. 결론: 동아시아의 미래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태동

이 글은 <동아시아연구단>이 지난 2년간 연구한 두 프로젝트 “동아시아의 발전과 위기”와 “동아시아의 대응과 선택”을 총괄하는 거시적 비교의 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정치적 대응과 지역통합 과정을 동북아 중심주의를 넘어서 더 넓은 지역적, 세계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큰 틀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과거와 상이한 체제나 유형으로 이행하거나 전환하였고, 모두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변화는 민족주의보다는 국제주의를, 국가주의적 통제보다는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셋째, 중국과 일본이 점진적 변화나 개혁을 지향하였다면, 동남아 국가들은 비교적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였다. 넷째, 중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다소 보수적이고 안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후적, 처방적 차원에서 개혁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다섯째,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주제어 : 동아시아, 민주주의, 경제통합, 아세안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제공한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 국내외지역연구(과제번호 2002-072-B12058) 제2차년도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신윤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세걸(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이성형(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영서(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동아시아연구단〉은 “동아시아의 발전과 위기”를 주제로 한 1차년도 공동연구에 이어 “동아시아의 대응과 선택”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총 8권의 단행본으로 묶어 내었다. 이중 다섯 권은 2005년 말에 이미 출판되었고, 일본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편집이 완료되어 곧 출판될 예정이다. 이제 2차년도 연구가 종료되었고 볼 수 있으므로 필자들은 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해 보기로 하였다.

출판된 책과 완성된 원고를 통해 2차년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18편, 일본 18편, 동남아 20편으로 구성된 56편의 연구논문과 5편의 서론을 포함하면 총 61편의 논문이 출판된다. 비슷한 양의 제1차년도의 연구결과와 합하면 무려 120편이 넘는 논문이 2년 만에 쏟아져 나온 셈이며, 이는 아직도 일천한 우리의 지역연구와 동아시아연구 역사에 조그만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 인문사회과학 역사상 최초로 중국, 일본, 동남아 전공자들이 동아시아연구라는 공동의 기치 아래 모여 2년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동북아중심주의의 편협한(parochial) 기존 시각을 교정하고 성장, 위기, 통합의 과정이 더 넓은 지역적, 세계사적 맥락과 틀 속에서 분석되고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차년도는 “‘동아시아의 대응과 선택’이라는 공통주제 하에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1990년대 위기(혹은 잠재적 위기)와 대내외적 변화에의 압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정책적·제도적 대응의 노력을 기우려 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동아시아연구단 2002, 43). 총 56명의 동남아, 일본, 중국 지역

연구자들은 3개 팀으로 나뉘어 동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난 위기의 양상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및 제도개혁 등에 대해 팀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별로 구성된 각 연구팀은 다시 정치경제, 정치, 사회문화라는 분야별 소분과를 구성하여 주제별로 보다 세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 일본, 동남아, 비교이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공동필자들은 이 연구결과물을 “비교적 관점에서 종합·분석하고, 이론적 함의를 추출”하기 위해,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별, 국가별 평가 대신, 정치경제, 정치, 사회문화 분야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영역별, 주제별 평가를 시도하였다(비교이론팀의 제1차년도 연구결과에 관하여는 김세걸 2004, 백영서 2004, 신윤환 2004, 이성형 2004를 볼 것).

우선 정치경제 분야에서 19명의 연구자들은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 확산된 신자유주의와 개혁의 흐름에 동남아, 중국, 일본이 보인 대응방식은 무엇이었으며 그 성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제1차년도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세 지역과 이에 속한 국가들이 당면했던 경제적 문제점이나 위기는 그 시기와 강도는 달랐지만 기존의 성장전략과 경제정책을 재고하고 강하게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의 바람과 세계화의 압력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외부적 압력과 경제적 요구로 구성된 투입은 내부적 투과 과정을 거쳐 개혁 등 정책수단의 형태를 띠는 산출을 낳게 된다. 갑자기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에 당면했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감염” 위협에 노출되었던 인근 동남아 국가들, 이미 오랫동안 “잃어버린 90년대”라고 불린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 그리고 비록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성장의 모순과 그들이 지속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던 중국이 선택했던 정책과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달랐던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즉 정책이나 개혁의 성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던가?

둘째로, 정치 분야 공동연구를 담당한 19명의 연구자들은 동아시아

의 경제위기의 여파로 또는 그것의 전후에 야기된 정치변동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변동이라 함은 민주화로 대표되는 체제 수준의 거시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한 과거 정부나 리더십의 재집권 실패, 정부-의회관계나 정당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정치행태와 같은 정치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수준과 차원을 포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불안정한 체제에서의 거시적 변화와 안정적 체제에서의 미시적 변화를 모두 중시하여 개별적인 국가들의 구체적 경험들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정치변동의 이론적 추상성과 사례의 구체성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 경제위기 후에 체제의 위기, 이행, 공고화 등 상대적으로 커다란 변동을 경험하게 되는 동남아 국가들, 장기불황 속에서 오래 묵은 정치개혁의 숙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일본, 급속 성장으로 증대될 정치참여의 요구를 지도부 개편과 지방선거의 도입으로 풀어 보려는 중국 등,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들을 어떠한 수준에서 일반화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위기라는 변수와 정치변동이라는 결과는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공동연구는 18편의 사회문화 분야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영역 자체가 광범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사회, 문화 체계들은 실로 다양하고 이질적이라 일관된 문제의식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상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문화적 개방과 수용”, 일본에 대해서는 “소자·고령화사회의 사회변화”를, 그리고 동남아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와 사회문화적 갈등”이라는 주제를 계획했다. 이러한 연구계획은 실제적인 수행단계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 중국은 “이념과 사상, 전통문화, 가족과 종교 등의 변화와 적응”, 일본은 “교육, 양성평등, 고용분야에서의 개혁과 지역사회에서 사회시스템의 변화”, 마지막으로 동남아는 “동남아의 증산층, 시민운동, 지역사회”와 같이, 세 하위지역 모

두에 대하여 연구주제를 구체적이고 넓게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화변동 양상을 관찰,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남아 연구팀과 일부 일본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경제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지만, 폭넓게 ‘근대화나 세계화에 따른 사회문화변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분야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검토한 공동필자의 한사람인 백영서(이하 제4절)는 각 지역과 국가에 대한 연구들을 묶어 주는 주된 개념으로서 중국의 “전통”, 일본의 “개혁”, 동남아의 “중산층”을 끄집어내고 있다.

이 세 분야에 걸친 현상과 변화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고 지역별이나 유형별로 특성화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필자들은 (1)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사회는 외환위기가 급속한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과거와 상이한 체제나 유형으로의 이행과 전환,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일제히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2) 민족주의보다는 국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주의적 통제보다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3) 중국과 일본이 점진적 변화나 개혁을 보여주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비교적 급속한 변화 양상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드러내며, (4) 중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다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면 일본은 사후적, 처방적 차원에서 더 개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본다. 이하 제2, 3, 4절에서 정치경제, 정치,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총괄적으로 소개하고 각 분야에서 드러나는 지역별, 유형별 차이를 검토한 뒤, 제5절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야별 분석에 의존하여 교차국가적 비교를 행함으로써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I. 위기와 경제개혁

199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위기에 대한 대응의 결과, 각국의 정치경제제도 및 성장전략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는가?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단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토론하려고 한다. 위기의 양상과 대응 방식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먼저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공동의 함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 1. 일본 : 성공의 위기와 일본형 시스템의 분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위기가 있었다. 일본의 사례가 그렇다. 일본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처럼 직접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버블경기의 붕괴에 따른 부실채권 문제 등으로 심각한 금융 불안을 겪어야 했고, 장기불황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했다. 이는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일본형 시스템이 한계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이란 일본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형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사회로부터 “자율적”인 국가의 “계획 합리적”이고 “시장 순응적”인 정책 개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주로 은행을 통해 조달하는 간접금융시스템, 그리고 수출드라이브 및 요소투입형 성장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순기능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일본은 “구미 따라잡기” 근대화의 목표를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일본형 시스템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 따라잡기 근대화의 달성은 국가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은 “발전국가”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를 초래함으로써 시장자유화를 촉진시켰다. 무역흑자의 증대는 한편으로 과잉축적된 자본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허용하도록 압박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부문 대기업들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해외금융시장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다시 회사채 발행 규제의 완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였다.

그 결과 전후 일본의 국가-기업 관계를 매개하던 금융부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우량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은행차입보다는 직접금융을 더 선호함으로써 “메인뱅크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간접금융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량기업들이 은행을 떠나자 은행은 새로운 대출 고객을 찾아야 했고, 그 틈을 메운 것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건설, 부동산, 유통업체의 기업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1980년대 말 버블경기의 주역이자, 1990년대 금융 불안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것이다(진창수 2006; 손열 2006).

이처럼 일본형 시스템의 위기는 세계화의 압력이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일본 정치경제의 주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반응하였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저항하는 그룹이다. 전자는 기존 시스템의 기득권 구조가 새로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 하에 시대낙후적인 일본적 관행을 혁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영미식 개방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부문 및 성장산업의 종사자들 가운데 그 지지자들이 많다. 후자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일본형 시스템의 장점을 살린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한다. 국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내수부문 종사자들 가운데 그 지지자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정책과정은 이 양대 그룹간의 정책대결로 점철되어왔다. 전자 그룹이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개혁 담론을 주도해왔다면, 후자 그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총론 찬성, 각론 반대” 방식으로 실제적인 개혁을 지연시켜왔다. 후자 그룹은 조직화된 표 동원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정치적으로 과대 대표될 수 있었고, 시장논리에서의 불리함을 정치논리로 상쇄시킬 수 있었다. 금융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진창수 2006)나 재정적자 확대 요인에 대한 분석(김호섭 2006), 유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연구(최태욱 2006), 한일 FTA에 대한 논의(곽진오 2006) 등은 이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손열(2006)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의 정치경제시스템이 일본형 시스템에 고유한 전통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부문과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영미식 제도와 관행을 받아들인 탈전통적 부문이 공존하는 “복합경제사회”로 진화해가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런 사회에서 “국가는 스스로 분권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시장행위자 및 시민사회와의 협치(協治)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에서 위기에의 대응 과정이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되지 않고 점진적이며 타협적인 방식으로 전개된 것은 그것이 바로 ‘성공의 위기’로서 왔기 때문이다. 즉 일본형 시스템의 성공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층이 두터웠기 때문에 일본형 시스템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압력을 오랫동안 버텨내면서 영미식 시스템과의 공존을 모색해가고 있는 것이다.

## 2. 동남아 : 외자의존형 성장의 위기와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

동남아 지역은 종족과 언어,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양할 뿐 아니라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적 발전단계가 다른 11개국으로 나뉘져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여기서는 일단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남아 신흥공업국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후발 신흥공업국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자본과 외자기업을 대거 유치하여 수출드라이브 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해외자본 유입에 의존한 동남아의 고도성장정책은 과잉투자문제를 유발시키고, 금융부문의 내재적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표면화되면서 경제위기를 보다 심화시켰다”(권율 2005, 37-38). 세계시장의 수요 변동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투자자들의 자본철수나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근집행동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자본 유입에 의존한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문란을 규율할 수 있는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은, 국가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로부터 자율적인 강한 국가도, 과두 지배세력의 전횡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취한 자본자유화 및 금융자유화 조치는 민간부문의 무분별한 단기자본유입을 확대시켰고, 이렇게 유입된 자본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어 버블경기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막대한 부실채권을 양산하였으며, 이것이 이들 국가의 금융 불안과 대외신인도를 악화시켜 국제금융자본의 국외이탈과 투자 회수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위기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위기에의

대응 방식은 달라진다. 그것이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통화위기였다고 볼 경우, 투기자본화된 국제금융자본의 군집적 투자행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문제의 본질을 이루게 된다. 이요한은 ASEAN 국가들의 지역협력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 논의는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기가 경제주체들 사이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로부터 발생했다고 볼 경우, 시장의 불투명성이나 정치부패구조 등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문제의 해법이 된다.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자유화를 주장하는 IMF의 시각이 이에 속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라토리엄(국가지불유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IMF가 요구하는 경제자유화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부실채권과 과잉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부문과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합병되고 외국투자자들에게 매각되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많은 규제들이 철폐되었다. 또한 IMF의 권고에 따라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윤진표 2005; 전제성 2005).

말레이시아는 IMF의 처방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선택하였다. 마하트르가 자본통제 정책을 선택한 것은 그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경제위기를 내적 요인으로 돌리기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즉 경제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마하트르의 반(反)세계화 정책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외국투자자와 국내 시민사회의 압력은 자본통제 정책의 많은 부분을 철회시켰으며, 결국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선화하게 만들었다. 역설적으로 위기 이후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김동엽 2005).

필리핀은 경제위기의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국가와 정치 체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실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할 수 없었다. 라모스 시대의 경제자유화 개혁만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 그 외의 정치·사회개혁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정치·사회개혁으로 국가기구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는 한, 필리핀의 획기적인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박승우 2005).

베트남 역시 경제위기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시장경제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영기업 개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장 등의 혜택을 줄여감으로써 국영기업을 시장경제에 적합한 기업으로 만드는 한편, 경영진과 노동자 개인에게 소유지분을 할당함으로써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사유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영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타 회사의 지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함으로써 '경제집단'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베트남 경제는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접근해갈 것으로 전망된다(이한우 200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남아의 신흥공업국들은 경제위기 이후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간에 시장자유화 정책을 통해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로 수렴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3. 중국 : 불균등 발전의 위기와 중국식 발전전략의 특수성

일본과 동아시아의 선·후발 신흥공업국들이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중국 경제는 외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중국이 변화의 압력으로부터 빚겨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에 따른 빈부격차와 지역격차의 확대,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의 증가, 경기과열에 따른 버블경제의 위험, 금융부문의 취약성, 정치부패의 만연, 농민 소요와 소수민족 분리주의운동의 대두 등 중국 정치경제가 해

결해야할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김재철 2005; 전성홍 2005).

이러한 개혁 과제들 가운데는 중국만의 고유한 과제도 있고, 다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도 있다.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문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문제이지만, 사회주의 이념과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그 강도에서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국가의 이념적 정통성을 훼손할 것이고, 지역격차의 확대는 소수민족이나 지방정부의 분리주의운동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련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찍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선회하였다. 종래의 폐쇄경제체제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내재된 비효율과 만성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했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개방은 점진적으로 또한 실험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먼저 경제특구로 선정되어 개방화·시장화·사유화의 길을 밝힌 동부 연안지역이 타 지역보다 앞서 발전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정과 정치적 통합을 위해 지역격차 문제의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부대개발과 동북개발이다. 서부대개발이 성공할 경우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공동발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내수시장을 확대시킴으로써 중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문제는 막대한 개발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있다(허홍호 2005). 국가의 재정지원보다는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인 동북개발도 그 성패는 자본유치에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장윤미 2005).

한편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유제 개혁과 정보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공유제 중심 소유체제에서 오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소유제 개혁은 지방간 경쟁을 통한 발전

과 시장체제의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방 내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간섭수단을 제도화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정환우 2005). 마찬가지로 정부의 효율적 운영과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보산업화 정책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의 기회를 넓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IT산업의 발전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민자 2005).

중국식 발전경로에서 특기할 것은 중국의 개방화·시장화·사유화가 분권화를 통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지방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급진적인 시장자유화 정책을 취해도, 중앙정부는 언제든지 시장을 “계획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발전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중국식 발전경로가 다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엄청난 잠재적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개혁개방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외국의 자본·기술을 결합시켜 만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국 경제는 성장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내수주도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자신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1위의 외국자본 직접투자(FDI) 유치국으로 부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4. 비교 분석의 함의 :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색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개별국가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위기의 성격

과 양상, 그 직접적 원인이 각기 다르고, 또 개별국가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달랐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대응의 교차국가 비교

	일본	동남아	중국
위기 이전의 발전모델	- 강하지만 민주적인 발전국가 - 국내저축 간접금융 - 수출주도형 성장	- 약하면서 권위주의적인 발전국가 - 외국인자본 직접투자 - 수출주도형 성장	- 강하면서 권위주의적인 발전국가 - 외국인자본 직접투자 - 수출주도형 성장
위기의 성격, 양상, 원인	- 성공의 위기 - 장기불황, 부실채권 - 세계화의 압력	- 외자의존 성장의 위기 - 외환위기, 부실채권 - 외국인자본의 투자 회수	- 불균등발전의 위기 - 사회불안 - 빈부격차, 지역격차
위기에의 대응	-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민영화, 규제 완화, FTA 추진) - 반(半)자율적·점진적 개혁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합병, 해외매각, 규제완화, 시장 투명성 강화) - 타율적·급진적 개혁	- 발전·안정의 병행추구 - 힘 있는 정부 - 서부대개발, 동북개발 - 내수주도형 성장 - 자율적·점진적 개혁

출처: 김세결의 정리.

이상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의 예방 및 관리에서 자율적인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율성이 약한 동남아 국가들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규율하지도 못하고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군집행위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반해, 자율성이 강한 중국 정부는 비슷한 외적 조건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위기관리에 성공적이었다.

둘째, 타율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추진한 나라들은 기존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급속히 해체되고 영미형 시장경제 모델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 나라들은 기존의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영미형 시장경제 모델이 병존하여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전자의 사례에 속한다면, 일본은 후자의 사례에 속한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통해 영미형 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 고용 불안의 확대, 사회의 양극화 심화, 외국자본의 경제 지배력 강화, 공공부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민간투자의 위축과 성장 동력의 잠식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III. 위기와 정치적 대응

199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그것의 정치적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절에서는 위기관리와 극복의 정치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그 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위기의 양상과 대응 방식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먼저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공동의 함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 1. 일본 : 정치와 외교의 개혁 정치

55년 체제의 해체 이후 10여 년간 일본정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민당의 일당우위 지배체제 아래 형성된 관료지배 체제와 정-관-재의 이익유도 정치는 대중의 광범한 비판에 노출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구도를 모색하면서 일련의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였다. 다당제가 등장하였고, 선거제도가 개정되었으며 정치개혁법도 통과되었다. 강력했던 관료지배 체제도 정치가 주도형으로 바뀌었고, 정

치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철의 삼각형 정-관-재의 이익유도정치도 점차 약화되어 정치부패도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은 자민당 우위체제의 제도적 기반이었던 중선거구제의 폐지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의 도입이었다.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적인 견해는 자민당의 우위체제의 지속을 전망하지만, 2003년 중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일당우위 다당제가 양당화 현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갑윤(2006)은 선거제도의 결과로 양당제가 안착되고 이념도 수렴현상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파벌주의와 정치부패, 정경유착과 이익유도정치도 약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는 경제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 이 될 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얻은 ‘수확의 10년’ 이라고” 평가한다.

2001년의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역시 관료주도의 정치행정 시스템을 혁파하는 것이었다. 관료의 비대화, 부패, 비효율성은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성청은 슬림화되었고, 정치행정 시스템도 내각의 기능이 강화되어 관료주도에서 정치가 주도로 바뀌었다. 내각의 기능이 강화되고 수상의 리더십이 중요해졌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정민영화도 가능해진 것이다(고선규 2006; 이정진 2006).

일본의 대외정책 역시 1990년대 들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최운도 2006; 박철희 2006). 한편으로는 미일동맹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이나 평화헌법 개정 운동을 통해 보통국가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이론은 반응국가(reactive state)론이다. 일본은 외압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외압(foreign pressure)이 있을 때 반응하며, 외압이 없으면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의지도 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철희(2006)는 이 논리가 서구중심적 논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본의 대외정책은 외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국내 이익집단 응집도의 강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 대점법이나 미일동맹 변화와 같은 사안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이므로 타협하거나 융합하지만, 중국과 한국이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요구 같은 사안은 별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동적 대응까지 내놓고 있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은 반응형 국가론이라 상호작용형(interactive) 의사결정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동남아 :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동남아 경제는 1997년에 파국적인 국면을 맞았지만 5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였다. 상대적 고성장, 파국적 위기, 조기회복이란 사이클 속에서 지난 10년간의 역사는 다양한 이론적 함의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국제적 조건은 별로 변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여전히 경제회복이 부진하다. 그 이유는 내부적 조건의 편차에서 기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객관적 조건이 부각되는 경제적 분석과는 달리 위기관리의 정치과정이라는 주체적 조건에” 주목한다(박사명 2005a, 16). 먼저 아세안의 노력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지역의 현안에 대한 집단적 대응으로 ASEAN은 위기 국면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개입하였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역내통합은 과거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같은 역내 리더십의 부재, 만장일치 합의방식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역외세력의 복잡한 이해관계 개입으로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하지만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지역적 구심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궁찬 2005).

태국의 경험은 경제위기가 정치 민주화의 가속기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다. 추언 정부는 위기의 절정에서 민주개혁과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한다. 부패척결, 지방분권, 정치참여의 확대를 통해 정치혼란이 극복되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경쟁 촉진, 중앙은행의 강화를 통해 경제개혁도 진행된다. 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반발로 다소 민주주의 성향을 지닌 탁신 정부가 들어서지만 자유주의 개혁은 부정되지 않았고, 태국은 빠른 경제회복의 길로 진입한다(김홍구 2005).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약한 국가와 강한 사회”의 면모를 지닌 필리핀은 변하지 않는 과두제 지배사회의 영속성을 반영한다(박기덕 2005, 142ff). 민주화 이래 수많은 정부가 명멸했고 다양한 개혁조치가 취해졌지만 파행적이고 부패한 정치과정은 변함이 없었다. 강한 사회는 허약한 국가를 포위하여 각종의 개혁조치를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최근 아로요 정부의 위기도 정치적 무능과 경제적 정체의 악순환으로 요약될 수 있는 만성적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도 경제위기가 정치민주화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위기관리 실패에 따라 주어진 광범한 ‘기회구조’에도 불구하고 수하르토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해 경제위기와 민주화의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나오지 못했다. 미진했던 군부개혁, 분출한 지역갈등, 여전한 정치부패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이동운 2005).

말레이시아에서는 경제위기가 민주화를 전진시키기보다는 마하티르의 권위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황인원 2005). IMF의 통제권 바깥에서 버티기에 성공한 마하티르의 실험은 나름대로 관찰의

대상이다. 민주화의 계기가 될 뻔 했던 위기의 초기 국면에서 집권여당 내부의 균열이 있었지만, ‘권력의 사유화’를 완고하게 밀어붙인 마하 티르의 정치공학은 열려진 기회구조를 무산시킨다. 한 때 엘리트와 대중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주의적 ‘신정치’(new politics)의 단초는 아깝게도 꺾이고 말았다.

1997년 경제위기로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은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의 길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혁의 길로 접어들었다. 개혁세력이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안보국가에서 발전국가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국영기업 개혁, 사유부문 확대, 직접투자 유치정책 등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만약 이처럼 시장과 사회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향후 베트남 사회에서도 제한적 다원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기초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정연식 2005).

발전의 편차가 불균등한 동남아 국가들이지만 1997년의 경제위기는 대외적으로 민족주의적 대응보다는 국제주의적 대응을, 대내적으로 국가주의적 관리보다는 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을 일반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보편성을 확인시켰다. 이제 동남아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와 연결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강조한다. “지속적 경제발전과 개방적 지역주의의 핵심적 매개고리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를 향한 동아시아 정치발전이다”(박사명 2005a, 24).

### 3. 중국 : 발전과 안정의 동시병행 추구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9%를 넘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구가해왔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제고시

켰지만, 이를 추동해온 불균등 발전전략은 심각한 빈부격차, 내지와 연안 지대의 발전 격차, 농민공 문제 등을 낳은 바 있다. 도시에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농촌에서는 부패한 관료들의 과도한 조세징수에 항의하는 농민의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게다가 1억 3천만명이 넘는 농민공들이 도시의 건설공사판과 하위직종을 유동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성공의 결과로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아래로부터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중국이 “라틴아메리카화”(Latinization)의 길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Heginbotham 2004), 중국의 기적이 허구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도 있다(이토 타다시 2004). 하지만 본 프로젝트의 중국 연구자들 대부분은 중국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편다. 김재철(2005a, 16)은 “지도부와 엘리트들 간에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는 연대가 형성되어” 있고, “밑으로부터의 도전 또한 세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출한다. 대중시위 역시 여전히 고립적이고 분산적이라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빈부격차와 계층의 고정화 현상, 지역간의 격차 확대, 심각한 환경오염, 관료들과 기업인들의 부패, 빈발해지고 있는 대중시위 문제,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경향 등은 여전히 중국 지도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일련의 도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공산당의 답은 발전과 안정을 병행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경제발전의 후유증을 국가가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허약한 중국 사회에서 당분간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실험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안정의 요소를 고려하여 기존의 발전 관념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겼다.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는 “과학적 발전관”이란 이름으로 친환경적

발전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김재철 2005a, 25). 요소투입이 과다한 기존의 발전방식으로는 중국이 에너지 공급, 환경오염 문제 등을 비껴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발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혁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공유제 중심의 소유체제에서 오는 정부-기업 미분리 문제를 위해 재산권 개혁도 추진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체제 내 행위자들의 이익에 대한 고려 속에서 진행되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정환우 2005).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 역시 정부의 적절한 개입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IT 산업은 자국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동시에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의 이중적 역할 덕분에 빠른 시간에 급속한 발전을 경험했다(이민자 2005).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에서 중앙정부는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행한 바 있고, 아울러 낙후된 동북지역의 개발 구상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다. 전자가 국가의 거시적 계획과 재정지원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후자는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허홍호 2005; 장윤미 2005).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법제를 추구하여 당 지배체제의 안정을 기하며(전병곤 2005), 지방 수준에서 선거제를 확대하여 초보적인 수준이나 마 정치개혁도 단행하는 기민함을 보이고 있다(김도희 2005). 단위체제의 해체를 매울 사회보장제도도 급속하게 추진되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역시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다(이중희 2005). 연구자들은 대체로 중국 당국이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국내의 갈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봉합하며,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불만을 흡수하며 성공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4. 비교 분석의 함의 :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색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개별국가의 정치적 대응은 구체적 맥락에 따라 위기의 성격과 양상이 각기 달랐기에, 대응 방식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일 본	태국, 인도네시아	중 국
위기 이전의 정치모델	- 선진적 민주주의 국가 - 자민당일당우위 - 정관재 삼각체제	- 연성 권위주의 - 후원수혜 관계 - 정치적 부패	- 사회주의 일당체제 - 권위주의 체제 아래 경제개방과 개혁
위기의 성격, 양상, 원인	- 55년 체제의 종언 - 대중의 불만	- 외환위기 - 정실자본주의	- 경제적 성공의 위기 - 사회불안과 대중봉기 - 빈부격차, 지역격차
위기에의 정치적 대응	- 선거제 개혁(소선거구, 비례대표제) - 관료주도형에서 정치가주도형으로 정부조직 개편	- 자유주의 개혁과 민주화의 길(태국) - 미진한 개혁과 경제회복의 부진(인도네시아)	- 발전·안정의 병행추구 - 국가관리능력 제고 - 지방선거 도입 - 지역개발

출처: 이성형의 정리

#### IV. 성장과 위기 속의 정체성 변화: 중산층, 전통, 개혁의 문제

세계화의 압력이나 경제위기로 인해 야기된 사회문화적 갈등의 양상과 이에 대한 각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 방식을 비교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살펴보는 작업이 동아시아연구단의 공동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단의 2차년도 연구 성과를 총론적 관점에서 돌아보면, 우선 크게 눈에 띄는 관건어(keyword)는 중산층, 전통, 개혁이다. 각각은 동남아, 중국, 그리고 일본이 세계화의

압력에 대응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상호 비교해보면, 서로 연관된 면도 있음이 드러난다.

## 1. 동남아의 중산층: 이중성과 모순

먼저 중산층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980년대 이래의 동아시아 사회 변동의 지표로서 그 동안 가장 많이 주목받은 것은 아시아의 중산층 또는 ‘신흥부자’의 대두이다. 경제발전이 앞선 일본이나 그보다 좀 뒤늦은 NIEs는 물론이고 중국과 동남아국가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80년대 이래 (시차는 있지만) 중산층의 대두는 공통적이다. 사실, 동아시아에서의 중산층의 역할은 논쟁적이다. 맥도널드 햄버거와 핸드폰으로 상징되는 생활양식을 즐길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그들의 출신배경도 다양하고 자기정체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와의 관계가 단순치가 않기 때문이다. “맥도널드를 매일 사먹는 것이 곧 민주화운동”이란 말도 있듯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사적 경제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그들이 사회를 개혁·개방시켜 정치적 억압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면도 인정된다. 동시에 그들은 고도성장의 혜택을 즐기기 위해 권위주의적 권력과의 타협도 서슴지 않으며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한 채 사적 영역에 안주해 소비문화를 즐기는 “기술·경력지향적인” 집단이기도 하다(Mulder 2003, 9-10).

공동연구진은 동아시아 경제위기 전후한 시기 동남아 사회를 변화와 역동성의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내부자의 관점”(김민정 2005a, 17)에서 관점에서 동남아의 중산층을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세계적 의식과 소비수준을 국내로 도입하는 위치에서 국가의 변화를 추동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와 대립하면서 동시에 타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는다. 그리하여 세계화라

는 외적 조건에 대한 중산층의 내부적 대응방식은, “국가의 권한은 분산되거나 약화되고 있으며, 시민영역은 시장에 대한 견제력을 확대하는 듯이 보이고, 지방화는 국가와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도 하는 것이 된다(김민정 2005a, 28).

물론 그들이 중산층으로서 성장한 배경이나 그들의 구체적 직종, 분류 기준 등은 나라마다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층으로서 여전히 구성중인 동시에 분화중이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한다. 그들이 주도한 시민운동을 각 사회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모습이 펼쳐진다. 2001년의 피플파워(People Power)운동을 통해 중산층의 애매한 위상과 사회변화의 양면성이 드러난 필리핀(김민정 2005b), (신)중산층이 이슬람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홍석준 2005), 이 같은 이슬람이란 종교적 요소가 부각됨과 더불어 화인중산층과 지식인의 이념적 연대가 개혁운동에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그 운동의 주역인 중산층은 모순된 정치지향을 갖고 있는 말레이(오명석 2005), 중산층에 뿌리를 둔 도시기반의 시민운동과 농촌의 농민계급에 뿌리를 둔 시민운동의 연대가 확대되는 태국(조흥국 2005), 당-국가와 대중 사이의 쌍방향적 통로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단체가 기능하고 있는 베트남(노영순 2005), 그리고 다인종 다종족으로 구성되어 국가통합을 힘들게 하는 지역분쟁이 빈발하는 인도네시아(제대식 2005) 등과 같다. 이렇기 때문에 중산층의 대두로 도래하는 사회문화 영역의 역동성을 해석하는 작업은 본 연구에 그칠 수 없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일감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중산층 및 그들의 시민운동의 이중성은 단지 동남아시아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필자인 하나인 백영서(2004)는 전년도 과제에서 중국의 중산층 대두와 더불어 그들의 결합체인 사단(社團)의 역할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글에서 중국, 더 나아가면 동아시아의 중산층이 갖는 국가에의 의존성과 그로부터의 자율성의 양면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사회’란 개념이 제시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사회를 ‘민간사회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미의 시민사회 개념을 기계적으로 동아시아에 적용하지 않고 전통성과 근대성이 결합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중산층이 갖는 국가에의 의존성과 그로부터의 자율성의 양면성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2. 중국의 전통: 창조적 변용

‘민간사회’ 개념이 동남아 사회에도 적용가능한지 따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터이나, 그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넘기고, 여기서는 민간사회란 개념이 안고 있는 전통성과의 관련에 주목하고 싶다. 전지구화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사회문화 영역의 역동성을 전통과 연관된 민간사회와 대중문화에 기초한 소비사회의 두 측면을 통해 파악하면서, 이 양자의 결합 양상, 더 나아가 이것과 국가(내지 정치사회) 발전의 쌍방향적 관계를 한층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작업에서 그에 대해 제대로 거론하지 못해 아쉬웠다. 그런데 이번 2차년도 작업 중국연구팀의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전통을 초점에 맞춰, 세계화에 대응하는 중국이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분석하고 있어 앞으로의 이론화를 위한 기초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대륙에서는 전통에 대한 논의와 전통의 활용을 개혁개방 이후 주로 중공당과 지식인들이 좌우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대에 상응한 민간과 시장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전통을 매개로 민간과 국가가 화해하고 있으며 시장과 국가는 그러한 전통을 민간에 보급하고 유통시키는 데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이 쇠퇴하고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분열이 심해지는 중국 현실에서 전통이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들을 묶어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적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의 하나"가 된 것이다(이옥연 2005, 111).

이러한 중국인에 의한 전통의 창조적 변용은 개혁개방 이후에 나타난 천하관의 이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사회가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국인의 "관습 속에서 초자아로 기능하는 내부적 피안의 세계, 다시 말해서 대일통의 상징인 텐사(天下)"(김근 2005, 86)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천하관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도교의 '술(術)'도 한층 더 세련된 형태로 거대해진 시장의 유통망을 타고 번성해질 수 있고, 생명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북돋우는 도교의 기본정신은 앞으로의 중국 사회에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서대원 2005).

물론 전통의 창조적 변용이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일관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 문제에서 중국의 당-정은 서구중심적 사고의 경향을 막기 위해 전통으로의 회귀를 의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해방의 유산을 계승해 여성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신은영 2005). 또한 중국의 학술계는 물론이고 당-정에서도 조심스럽게 실험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모색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적 다당제'까지 거론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 모색도 전통의 창조적 변용과 친화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이희옥 2005).

그 좋은 예로 본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례를 들면, 짜오핑양(趙汀陽)은 2005년 출간된 화제의 저서, 『天下體系: 世界制度哲學導論』에서 중국의 전통적 천하관을 재해석해 유럽의 근대 민족국가가 확장된 형태인 제국주의의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21세기 평화의 세계질서 원

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왕후이(汪暉 2004)가 조공체제란 전근대적 유산을 탈근대적 국제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한 이론 작업도 일정한 공감 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이 모두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대륙의 새로운 사상운동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공간에서 이룩한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기반해 중국이 일종의 새로운 정신구조와 이념을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조류와 밀접히 관련되며, 또한 학계뿐만 아니라 인민이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을 대하면 우리는 ‘중국위협론’에 대처하는 중국 관방의 ‘책임대국’ 론이란 슬로건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내지 새로운 역할 규정이란 현실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이런 유의 전통의 창조적 변용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그를 둘러싼 논란도 중국 대륙 안팎에서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끊임없을 것이다.

### 3. 일본의 개혁: 체계의 재구조화

전통은 일본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최근의 개혁 과정 속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 속에 일본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사회관계가 해체되거나 재구조화됨에 따라 종래의 지연과 혈연을 바탕으로 한 사회조직은 사회통합의 중심이 아닌 주변적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농촌사회는 다양한 임의집단을 포함한 생애학습이나 이벤트, 축제 등을 통한 새로운 연대와 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기능집단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례가 다름 아닌 ‘지역만들기(まちづくり)’이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농촌의 대부분은 과소화와 고령화로 인한 전통적 사회

시스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황달기 2006).

이러한 변화를 전통의 해체와 소멸이라는 관점보다는 삶의 질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무라(村)나 지역사회가 가지는 총체적인 효율성이나 가치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재배치되거나 재창조되는 현상으로 이해하자는 본연구진의 제안(황달기 2006)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다시 보면, 일본이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90년대 후반 이래 일본식 고용제도와 관행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도 불황에 대한 기업들의 일시적 대응(따라서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면 회귀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인력구조의 변화, 정보화에 따른 화이트칼라직 근무조건의 변화, 근로와 관련한 가치관의 변화 등 장기적인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재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듯싶다(이숙중 2006).

이렇게 보면, 일본은 근대적 발전의 역사적 유산을 짊어지고 세계화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개혁을 위해 마치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교육개혁도 한층 더 노골적인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융합된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즉 교육개혁이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정치, 안보, 대외관계 등의 차원에서 '보통국가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타의 국가개혁과 일체가 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이지원 2006). 또한 이미 고령 인구가 17.2%에 도달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앙정부는 '개호(介護)보험'과 같은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령인구에 대한 각종의 정책적인 조치들을 집행하는 지역사회도 각각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응책들을 고안하고 있다(이문웅 2006).

이상과 같이 중산층, 전통, 개혁이란 관건어를 통해 동남아, 중국, 그리고 일본이 세계화의 압력에 대응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진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

로 남는 근원적인 과제는,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우리가 자명한 전제로 간주하고 있는 개념들을 상대화하기 위한 역사학적인 접근의 유용성을 깊이 고려하는 것이다. 근대가 생성해낸 여러 개념, 제도들에 대한 재검토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만하다(박훈의 “어린이” 개념사 연구 참조, 박훈 2006). 이러한 시각을 제대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동아시아인이 “모순의 통일체”인 세계화(박정동 2005, 224)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이중과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

## V. 결론: 동아시아의 미래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태동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과 위기가 극적으로 교차한 시기였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은 버블경기의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고도성장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도 개혁개방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부패와 소요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에는 세계화, 지역화,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확산이 있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적 시장개방 협상,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자유화 프로그램, 쌍무적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다양한 수준의 지역통합 움직임 등으로 표현되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압력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해체를 강요하였고, 정보기술혁명의 산업적 응용에 따른 경영 및 노동과정의 혁신, 전지구적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등 정보화의 진행은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였다. 상호 상승작용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압력 속에서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수출드라이브 및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내재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 앞에서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은 한때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21세기에도 계속 그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 국민국가 시대의 후발산업화 전략으로서 발전도상국의 모범이 되었던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이제 생명력을 상실한 채 역사의 박물관으로 퇴장당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자기혁신을 통해 세계화와 정보화의 압력을 수용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성장전략으로 무장한 채 계속 자기의 존재이유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우리 시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동아시아 경제 상황을 둘러보면, 〈동아시아연구단〉의 우려와 달리 일단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불황이나 경제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 나온 듯이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위기극복 전략들은 나라마다 달랐다는 점이다. 우선 경제위기가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밀어닥쳤던 동남아는 위기의 강도만큼이나 급진적으로 구조조정과 경제 자유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지원조건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개혁 요구였던 것이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초기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큰 차이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차이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IMF의 지원을 거부했던 말레이시아도 개혁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도에 있어서는 태국에 못지않았다. 또한 경제위기를 비켜갔던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곳에

서도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는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제위기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듯 일제히 성장의 피치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개혁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 두 나라에서 개혁이 더딘 까닭은 각각 다른 요인에서 기인한다. 일본이 세계화의 요구와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여러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자유화나 민영화가 ‘반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중국이 급속한 자본주의적 성장과 시장경제의 도입이 가져다 줄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인’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이 고도성장이 가져다 주는 “급증하는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실업, 부패, 국유기업과 금융부문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시위나 소요의 증대”(김재철 2005a, 13)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인 데 반해, 일본은 그간 미뤄 온 개혁을 점진적으로 단행하는 ‘사후적, 처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중국경제는 지나치게 과열된 경기를 “식히고” “연착륙”(soft landing)을 하기 위한 노력을 보일 정도로 성장세가 좋으며, 일본경제는 2005년에 들어서면서 15년이 넘는 장기불황의 골을 벗어나 힘차게 도약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의 정치는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일어났던 경제적 변화보다 더 다양한 변이와 큰 편차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우선 동남아를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이 급진적인 체제변동을 경험하였다. 즉 인도네시아는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에 성공하였고, 태국이나 필리핀은 민주주의가 좀 더 안정되거나 공고화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라오스와 같이 권위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들은 좀 더 자유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미얀마나 캄보디아는 오히려 권위주의적 성격을 더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주변 국가들의 따가운 시선과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표 3〉 동아시아의 정치체제와 정치변동

탈성장시대 / 성장시대	민주주의	권위주의	후기전체주의
공고화된 민주주의	일본	한국, 타이완, 태국, 몽골	
미공고화 민주주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권위주의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후기전체주의			중국, 베트남, 라오스

출처: 신윤환 2004, 23.

다른 한편으로, 일본과 중국은 리더십의 변화와 제도개혁을 통해 기성 정치를 탈피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55년 체제”로 표현되는 일당우위체제가 붕괴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병립제라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있었다. 이러한 정당체계의 변화는 더 큰 정치변동을 겪은 동남아나 한국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없으나 일본에서 정치사적 의미는 실로 큰 변화라 할 것이다. 또한 고이즈미총리의 5년 ‘장기집권’은 오랜 숙제인 정치, 경제 개혁을 상당 부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결코 약화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 좀 더 대중친화적인 지도부의 교체, 발전과 안정을 병행하는 정책 기초, 지방 수준에서 직접선거제의 확산 등 민주주의적 함의를 지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 속에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중국경제와 달리 중국정치는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예측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1990년대를 전후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한 지역별 정치적, 경제적 변화 (요약)

	일본	동남아	중국
경제위기 이전 성장전략과 정치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제 3각협력 발전국가</li> <li>- 관료주도 안정적 일당우위 정치체제</li> <li>- 미일동맹 쌍무관계 중시 외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 의존적 연성적 발전국가</li> <li>- 안정적 권위주의체제/ 불안정한 민주체제</li> <li>- 아세안중심의 동남아 지역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 중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개발독재)</li> <li>- 사회주의 일당독재(안정적 권위주의 체제)</li> <li>- “도광양희”</li> </ul>
경제위기의 원인, 전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자유화</li> <li>- “일본시스템”의 문제점</li> <li>- 장기불황과 대중불만</li> <li>- “55년체제”의 붕괴</li> <li>- 세계화와 미국의 압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급한 금융자유화</li> <li>- 도덕적 해이</li> <li>- 경제위기와 사회갈등</li> <li>- 정치불안정과 정치변동</li> <li>- 아세안의 무능, 취약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균등, 불균형 발전</li> <li>- 자본주의적 고도성장</li> <li>- 사회불안과 농민저항</li> <li>- 리더십의 변화</li> <li>- 미·일의 견제</li> </ul>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정치적 대응과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자율적·점진적 개혁 (처방적)</li> <li>-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민영화, 규제완화, FTA 추진)</li> <li>- 양당제적 정당체계</li> <li>- 평화헌법 개정 및 보통국가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율적·급진적 개혁 (처방적)</li> <li>-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합병, 해외매각, 규제완화, 시장 투명성 강화)</li> <li>- 자유화, 민주화</li> <li>- 개방적 지역주의 표방, 동아시아 지역협력 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적·점진적 개혁(예방적)</li> <li>- 발전·안정의 병행 (지역적 균형발전, 계층적 균등발전 추구)</li> <li>- 분권화와 직접선거</li> <li>- “화평굴기”</li> </ul>
	동아시아 지역주의 (ASEAN+3을 통한 지역협력과 장기적 지역통합 추진)		

출처: 김세걸·이성형의 논의에 대한 신용환의 변형과 정리

동아시아연구단의 공동연구가 빠뜨린 핵심적인 연구주제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그것은 본 연구단의 연구신청에 대한 지원기간 단축으로 무산된 제3차년도 연구과제인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지역통합의 모색”이라는 주제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남아와 동북아 간의 협력은 크게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제도화를 길을 걷고 있다. 이른바 동아시아 지역 협력 내지 지역통합으로 일컬어지는 이 추세는 각각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한중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의 좁은 협소한 지역 공간을 뛰어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넓은 협력 무대를 제공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형성해 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과 통합은 일본상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가속화한 1960년대 이후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미 물적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안행(雁行: flying geese) 모형이라 불리는 이 지역적 연계 성장 모형은 일본의 경제발전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동남아의 아세안 국가들을 차례대로 공업화 성장의 하늘로 견인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일본의 투자와 교역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성연계”(soft-ties)가 생겨나고 강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Pempel 2002). 이러한 경제적 끈이 중심이 된 지역협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되게 된 계기는 바로 1990년대 말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동아시아를 함께 강타한 외환위기였다. 이 외환위기 덕분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WTO, IMF, IBRD, APEC과 같은 초지역적 국제협력기구들이 결정적인 위기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제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은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ASEAN+3(한중일)이라고 불리는 ‘지역협력체’이다. 아직 독자적인 본부나 현장조차 갖지 못했지만, 13개 정부 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회의 수만 해도 49회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조직’이 되었다. ASEAN+3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발 빠르게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붐을 이루어, 중-ASEAN,

한-ASEAN, 일-ASEAN FTA가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 단계에 와 있고, 외환과 금융 분야에서 스왑협정도 체결되어 그 규모를 키워 나가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여행객이 중심이 된 인적 교류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비정부단체간의 지역적 연대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관심을 가진 관료들과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1) 과연 지역 협력이나 통합이 동아시아 각국의 발전과 성장에 지속적인 추동력을 제공할 것인가, (2) ASEAN+3이 제도적 발전을 거듭하여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라고 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3)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한 해답과 그 방법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이미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 참고문헌.

- 김도희 편. 2005. 『새로운 중국의 모색 II』. 서울: 폴리테이아.
- 김도희. 2005a. “서론: 중국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김도희(2005) 편.  
\_\_\_\_\_. 2005b. “선거의 확대와 제도개혁: 향진 간부 선거를 대상으로.” 김재철(2005) 편.
- 김민정 편. 2005. 『동남아의 중산층, 시민운동, 지역사회』. 서울: 폴리테이아.
- 김민정. 2005a. “서론: 동남의 중산층, 시민운동, 지역사회.” 김민정(2005) 편.  
\_\_\_\_\_. 2005b. “필리핀의 ‘피플파워’와 중산층: ‘변화 없는’ 사회의 역동성.” 김민정(2005) 편.
- 김세걸. 20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과와 모순: 발전모델 추상수준에서의 분석.” 『동아연구』. 제46집.
- 김재철 편. 2005. 『새로운 중국의 모색 I』. 서울: 폴리테이아.
- 김재철. 2005a. “서론: 개혁개방의 역설적 결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김재철(2005) 편.  
\_\_\_\_\_. 2005b. “국제적 요인과 중국의 국내적 변화: 발전과 안정을 중심으로.” 김재철(2005) 편.
- 김호섭. 2006. “1990년대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현상의 공공선택이론적 분석.” 진창수(근간) 편.
- 김홍구. 2005. “태국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박사명(2005) 편.
- 노영순. 2005.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당-국가와 대중의 관계.” 김민정(2005) 편.
- 동아시아연구단. 2002. “동아시아의 성장, 위기, 통합: 21세기 발전모델의 탐색.”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중점연구분야(국내외지역연구) 기초학문 연구계획서(과제번호: 072-BL2058). 제1권.
- 박 훈. 2006. “근대 일본의 ‘어린이’ 觀의 형성.” 이숙중(근간) 편.
- 박기덕. 2005. “위기에 대한 필리핀의 대응과 정치적 선택: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박사명(2005) 편.
- 박사명 편. 2005.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서울: 폴리테이아.
- 박사명. 2005a. “서론: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박사명(2005) 편.  
\_\_\_\_\_. 2005b.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박사명(2005) 편.
- 박승우. 2005. “필리핀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윤진표(2005) 편.
- 박영준. 2006. “‘잃어버린 10년기’ 일본 정치세력의 국가구상 비교: 보통국가

- 론과 평화국가론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구상.” 진창수(근간) 편.
- 박정동. 2005.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김도희(2005) 편.
- 박철희. 2006.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패턴의 변화: 반응형 국가(reactive state)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면우(근간) 편.
- 배극찬. 2005.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아세안(ASEAN)의 대응.” 박사명(2005) 편.
- 백영서. 2004.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사회문화 변동: 전통사회의 해체와 시민 사회의 성장.” 『동아연구』. 제46집.
- 서대원. 2005. “도교와 중국의 현대화.” 김도희(2005) 편.
- 손 열. 2006. “일본에 있어서 21세기적 국가-기업 간 관계: 복합효율과 복합경제사회를 위한 시론.” 진창수(근간) 편.
- 신운환. 2004. “동아시아의 발전과 변동: 회고적 재평가.” 『동아연구』. 제46집.
- 신은영. 2005. “중국 가족의 변화와 국가의 대응.” 김도희(2005) 편.
- 오명석. 2005. “말레이 중산층과 개혁(Reformasi)운동.” 김민정(2005) 편.
- 윤진표 편. 2005.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폴리테이아.
- 윤진표. 200a5. “서론: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윤진표(2005)편.
- \_\_\_\_\_. 2005b. “태국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정치경제.” 윤진표(2005) 편.
- 이갑윤. 2006. “일본의 선거제도 개정과 정당제의 변화.” 이면우(근간) 편.
- 이동률. 2005.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김재철(2005) 편.
- 이동운. 2005.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개혁을 위한 진통.” 박사명(2005) 편.
- 이면우 편. 근간. 『일본정치: 국가정책의 재정립』.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면우. 2006. “일본의 정치개혁, 정당개혁: 자민당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면우(근간) 편.
- 이문웅. 2006. “일본사회의 노령화와 지역사회의 대응: 도쿄도 미타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숙중(근간) 편.
- 이민자. 2005. “정보산업화와 정부의 역할: IT산업을 중심으로.” 김재철(2005) 편.
- 이성형. 2004. “성장기 동아시아의 정치변동: 체제변동과 도전.” 『동아연구』. 제46집.
- 이숙중 편. 근간. 『일본 사회문화: 소자·고령화 사회의 변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숙중. 2006. “일본의 장기불황과 고용 개혁.” 이숙중(근간) 편.
- 이요한. 2005. “외환위기와 ASEAN 경제협력의 전환.” 윤진표(2005) 편.
- 이육연. 2005. “개혁개방 이후 전통문화의 재평가와 변용: 전통에 대한 인식 변

- 화와 관련하여.” 김도희(2005) 편.
- 이정진. 2006. “국회의 제도개혁: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이면우(근간) 편.
- 이중희. 2005.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추진.” 김재철(2005) 편.
- 이지원. 2006. “현대 일본의 교육개혁: ‘유토리교육’의 논리와 동요.” 이숙중(근간) 편.
- 이한우. 2005.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의 정치경제.” 윤진표(2005) 편.
- 이희옥. 2005. “중국의 체제전환과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모색.” 김도희(2005) 편.
- 장윤미. 2005. “중국의 동북개발 구상과 발전전략: 배경, 조건 및 쟁점.” 김재철(2005) 편.
- 전병곤. 2005.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 건설과 체제안정.” 김재철(2005) 편.
- 전성홍. 2005. “변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 평가와 전망.” 김재철(2005) 편.
- 전제성. 2005.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와 산업관계의 변화: 노동법 개정의 내용과 과정 분석.” 윤진표(2005) 편.
- 정연식. 2005. “베트남의 국내외적 위기와 정치적 대응.” 박사명(2005) 편.
- 정정숙. 2006. “일본의 양성평등개혁의 의의와 전망.” 이숙중(근간) 편.
- 정환우. 2005. “소유제 개혁과 새로운 자산관리체제의 모색.” 김재철(2005) 편.
- 제대식. 2005. “수하르트 정권 이후 표면화된 인도네시아 지역분쟁.” 김민정(2005) 편.
- 조흥국. 2005. “1997년 경제위기 전후 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김민정(2005) 편.
- 진창수 편. 근간. 『일본 정치경제: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진창수. 2006. “일본 금융 개혁: 정책변화의 정치적 요인.” 진창수(근간) 편.
- 최운도. 2006. “일본의 위기관리와 미·일 위기관리체제: 신가이드라인과 유사법제를 중심으로.” 이면우(근간) 편.
- 최태욱. 2006. “구조조정과 보상의 정치경제: 일본 유통산업 사례.” 진창수(근간) 편.
- 허홍호. 2005. “서부 대개발 전략과 발전 전망.” 김재철(2005) 편.
- 홍석준. 2005.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에서의 지방화와 사회변화: 끌란탄(Kelantan)주와 프렝가누(Trengganu)주의 이슬람화(Islamisasi)를 중심으로.” 김민정(2005) 편.
- 황달기. 2006. “일본의 전통적 사회시스템의 붕괴와 재편: 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숙중(근간) 편.
- 황인원. 2005.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와 마하티르의 정치적 대응.” 박사명(2005) 편.

황재호. 2005. “서구사상의 중국적 수용에 대한 연구: 증체서용 논의를 중심으로.” 김도희(2005) 편.

汪暉. 2004. 『現代中國思想的興起』(上). 三聯書店.

趙汀陽. 2005. 『天下體系: 世界制度哲學導論』. 江蘇教育出版社.

伊藤 正. 2004. “‘世界の工場’という中國の虚構.” 『正論』 10月號.

Heginbotham, Eric, 2004. “The Latin Americanization of China?” *Current History*, September.

Mulder, Niels, 2003. *Southeast Asian Image: Towards Civil Society?* Silkworm Books.

Pempel, T. J. 2002. “The Soft Ties of Asian Regionalis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Visions and Strategies organized by the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Bank Hall, Seoul, December 11.

Response and Choice on Economic Crisis of East Asia :  
A Comparative Analysis

---

**SHIN, Yoon-Hwa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Sogang University

**KIM, Se keol**

Researche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RHEE, Sung-Hyu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Ehwa Women's University

**BAIK, Youngseo**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In this article, we provide an overview of the two-year project on the "Development and Crises in East Asia" focusing upon four aspects: economic growth, financial crises, political responses to overcome the crises, and the processes of regional integration. The project aimed to analyse these phenomena in a wider regional and global context criticizing the North-East-Asian centric perspective. The conclusion will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conomic crises prompted the transformation of old developmental regime of each country toward a more open and liberal model.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ccepted the new regime with or without resistance. (2) The new regime seeks an orientation more global and market-dominated, giving up the

old nationalistic and state-interventionist one. (3) China and Japan took the reform measures step by step, otherwise the South East Asian countries accepted the radical reform measures in a quite short time range. (4) China took piecemeal reforms to keep going the growth rally and to contain social and political unrests, but Japan had reform measures to cure the Japanese malaise prescrib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forces. (5) The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would grow up much bigger by multi-lateral and multi-layered channels.

**Key Words :** East Asia, Economic Crisis, Regional Cooperation